

2014년도 간부 후보생(경위)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1. 다음 중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한국인이 대한민국 내의 미국문화원에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미국문화원 측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 ② 일본인 甲과 乙이 미국에서 미국인 A를 살해하기로 서울의 한 호텔에서 공모한 후 미국에서 A를 살해한 경우
 - ③ 외국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필리핀의 카지노에서 한국인 甲이 도박을 한 경우
 - ④ 독일인 甲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식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경우

2. 다음 중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新法)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후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이 개정되어 그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나.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령의 형이 가볍게 개정되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모든 미신고행위에서 미신고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행위로, 다시 미신고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행위로 변경된 경우
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라. 범죄 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의 삭제와 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추행 목적의 유인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변경된 경우
마.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가 삭제된 경우

- ① 가, 나, 마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마

3. 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나. 인신매매죄
다. 체포·감금죄 라. 인질강요죄
마. 인질상해죄 바. 인질강도죄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다음 중 위법성 조각사유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갑자기 달려온 사람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피고인의 목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 끌어당기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②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 인정된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낙태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강간의 피해자가 강간범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강간범인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뽐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
- ④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려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정당방위 또는 과잉정당방위가 인정된다.

5. 다음 중 괄호 안의 죄에 대하여 판례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 ① 면허증에 그 유효기간과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미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
- ② 택시기사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택시 약 30cm 전방에 서서 좌회전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의무경찰의 무릎을 들이받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 ③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이 즉각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증거인멸죄)
- ④ 9세의 여자 어린이에 불과하여 항거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졸라 실신시킨 후 그 곳을 떠난 경우 (살인죄)

2014년도 간부후보생(경위) 채용시험 문제지

2014년도 간부후보생(경위) 채용시험 문제지					
과목	형법	응시번호		성명	
6. 다음의 설명 중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임차인 甲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하자 임대인의 며느리가 화김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셨던 바, 甲이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나. 공직선거후보자 甲이 다른 후보자 乙이 연설 중 자신의 다른 여성 구의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면서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자 물리력으로 연설을 중단시킨 경우 다.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甲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甲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 상해를 가한 경우 라.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별거 중인 처 甲을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데 격분하여 甲이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마. 치한이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피해자 甲에게 달려들어 강간을 하려하자 甲이 치한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힌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절취한 예금통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현금을 취한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다.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라.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마.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배임행위는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위조한 乙명의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은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② 甲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 乙에게 제공하여 신문에 보도되게 한 경우 甲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③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명의인인 보증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보증인이 아닌 자는 허위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보증서 작성의 범행을 범할 수 없다.					
9.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특별법위반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현행 형법상 성년자에 대한 단순약취·유인은 처벌하지 않는다. 나.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의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라도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되었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다. 18세의 여자를 유흥주점에 팔 생각으로 유인하여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강간한 후, 유흥주점 업주에게 넘기려다 검거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라. 여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 유인하였으나 감시가 소홀했기 때문에 탈출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간음목적약취·유인죄의 미수가 된다. 마. 모에게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父가 아이를 친구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갔는데, 母의 아이 인도요구를 거절한 경우 미성년자약취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바.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취행위에 동의하면 이 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14년도 간부 후보생(경위)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	-----	------	--	-----	--

10. 다음 중 예비·음모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 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은 부정된다. ② 간첩죄, 특수도주죄의 예비·음모는 처벌하지만 체포·감금죄, 도주원조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다. ③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 ④ 살해를 하기 위하여 흉기를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그 흉기로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기 전에는 살인예비죄를 인정할 수 없다.	13. 죄수(罪數)판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장거래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죄’는 범행 방법이 유사하고 그 피해자가 동일하므로 포괄 일죄가 성립한다. ②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위 두 죄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다수의 계(契)를 조직하여 수인의 계원들을 개별적으로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경우, 각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④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다.
11. 다음 중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나.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 한 경우에 이를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라. 가해자가 강간을 하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자신이 임신중이며 곧 남편이 돌아온다고 말하여 강간행위를 중지하고 도망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① 가, 다 ② 나, 라 ③ 나, 다 ④ 다, 라	14. 방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나. 甲이 친구 乙의 부탁을 받고 乙이 건네주는 금전을 밀수자금인줄 알면서 자신의 선박 기관실에 은닉한 행위는 관세법상 무면허수입예비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다.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피무고자의 방조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만 제3자를 방조한 피무고자에 대하여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 교통사고를 낸 甲이 자기 대신 사고운전자로 허위자백한 자신의 처에게 사고발생 경위, 도주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처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마. 간호보조원의 무면허진료행위가 있는 후 환자의 계속진료에 참고하는 진료부에 의사가 무면허진료 결과를 기재한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무면허의료행위 방조로 볼 수 있다.
12. 다음 중 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적법하다. ② 일반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해당 전과는 누범가중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가 아닌 경우라면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④ 3년의 누범기간 내에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14년도 간부후보생(경위)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	-----	------	--	-----	--

15. 다음의 부작위범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 나.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각각 성립한다.
- 다. 중고 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자신이 할부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채무가 있음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매도인은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라. 공중위생업을 하는 甲이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 등을 실장으로 임명하여 공중위생영업을 한 경우, 甲과 乙 등에게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물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에, 명목상 급여액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주재자가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을 물수·추징하여야 한다.
- 나.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물수할 수 없다.
- 다. 피고인은 공무원인 甲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甲은 피고인의 범행을 폭로하는 데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수 받았으며, 위 1억 원은 압수되었다. 이 경우 甲은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고, 압수된 1억 원이 甲의 소유인 이상 이를 물수할 수 있다.
- 라. 수뢰자가 뇌물을 다시 제3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마.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 행해진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의 죄와 확정판결 후의 죄로 분리된다.
- ②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
- ③ 경합범을 가중처벌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 보다 다른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해야 한다.
- ④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8.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도 법원은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 ②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감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는 없다.
- ③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자가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쳤을 경우 그 자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

19. 교사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② 교사행위에 대해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 ③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 ④ 피교사자가 교사행위 당시에 범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의 범행이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결의된 것이더라도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2014년도 간부후보생(경위)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20. 甲은 자기를 마중 나온 친구 乙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乙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甲이 乙을 강도로 오인함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 甲의 형사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된다. 나.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상해의 고의는 인정되나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된다. 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부인되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마.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1. 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므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형사미성년자라도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야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③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인정된다. ④ 심신장애 여부는 법원이 피고인의 행동 기타 재판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2.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도중 다른 공동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본사(本社)와 가맹점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맺은 가맹점주인인 피고인이 보관중인 물품판매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교회건축공사를 감독하면서 교회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교회에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통지하였으나 지급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보관하던 공사대금과 상계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금원을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원은 불법원인으로서 지급 받은 것이므로 조합장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3. 해상강도죄(「형법」 제340조 제1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소위 해적죄를 규정한 것이다. ② 해상강도죄에서 말하는 해상이란 영해와 공해를 포함하나, 적어도 지상의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 위임을 요한다. ③ 공해상에서 외국인이 국내 선박을 대상으로 범한 해상강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4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 ④ 해상강도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그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24. 방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사람의 주거용에 한정되지 않지만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②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 ③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있어서는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 불이 옮겨 붙지 못한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④ 건조물 내에 있는 사람을 살해할 생각으로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그 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케 한 경우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5. 강도살인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했지만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사람을 살해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별도의 범의로써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 살인행위와 재물취거행위는 포괄적으로 강도살인죄를 구성한다. ③ 재물을 강취한 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현주건조물에 방화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④ 강도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해진 경우는 강도살인죄를 구성한다.			
26. 공무원 甲, 乙, 丙은 관계업자 丁으로부터 직무에 관한 정당한 청탁을 받고 함께 술집에서 각자에 요한 비용이 불명하지만 20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았다. 이들은 술집으로 가기 위해 모범택시를 탔고 甲이 버럭도 낮짜이 있다고 하면서 택시비 3만원을 냈다.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의 뇌물액과 甲으로부터 추징해야 할 액수는? ① 뇌물액 및 추징액 모두 47만원 ② 뇌물액 및 추징액 모두 50만원 ③ 뇌물액은 50만원 추징액은 197만원 ④ 뇌물액은 50만원 추징액은 200만원			

2014년도 간부후보생(경위)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	-----	------	-----

2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 甲은 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 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 나.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모, 이웃, 행위자 일행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부정된다.
- 다.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 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등 이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
- 라.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경우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마.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하는 등 자질 및 공직 수행 자세를 비하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도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8. 폭행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 A, B가 甲에 대하여 접수된 피해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를 집행 중이었는데, 甲이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A를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B를 폭행하였다면, 甲의 A,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② 강요죄에서 강요의 수단이 되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어야 한다.
- ③ 집회·시위 과정에서 음향을 이용하여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한 경우 그것이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이루어 졌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될 수 없다.
- ④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29.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절도범 乙로부터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자기앞수표 10만원권 1매를 교부받아 식당에서 저녁 식사대금으로 4만원을 지불하고 잔금 6만원을 받았다. 甲은 장물취득죄만 성립한다.
- ②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하였다. 乙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③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하게 된 재물자체를 의미하므로 이중매매로 인하여 배임죄가 성립된 대상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甲은 乙(20세)에게 시계점에서 시계를 훔쳐올 것을 교사하고 乙이 훔쳐온 시계를 매수하였다. 甲은 절도 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30. 문서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 ② 공문서에는 명의인의 실재를 요하지 않지만, 사문서에는 명의인의 실재를 요건으로 하며, 다만, 사자명의의 사문서에 대해서는 문서의 작성일자가 생존 중의 일자로 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다.
- ③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공문서에 기간을 고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때에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 ④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31.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 ②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 ③ 공모관계는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한다.
- ④ 2인이 합동하여 절도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도망 하던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해를 입혔 다면 다른 1인에게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이 있다.

2014년도

간부후보생(경위) 채용시험

문제지

과목	형법	응시번호	성명
----	----	------	----

32. 甲은 할인매장에서 다량의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대에서 9만원의 물품대금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으나, 계산원이 실수로 91,000원을 거스름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서술하고 있는 아래의 문장에 ()에 들어갈 단어의 올바른 조합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거스름돈을 수령할 당시 甲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ㄱ)가 성립한다. 거스름돈을 수령한 후에 甲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ㄴ)가 성립한다. 전자(前者)의 (ㄷ) 성립의 근거는 (ㄹ)고지의무를 진 자가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고도 이를 제거하지 않음이다.

①	(ㄱ) 사기죄	(ㄴ) 점유이탈물횡령죄
	(ㄷ) 사기죄	(ㄹ) 신의칙상
②	(ㄱ) 점유이탈물횡령죄	(ㄴ) 사기죄
	(ㄷ) 점유이탈물횡령죄	(ㄹ) 계약상
③	(ㄱ) 사기죄	(ㄴ) 점유이탈물횡령죄
	(ㄷ) 사기죄	(ㄹ) 계약상
④	(ㄱ) 부당이득죄	(ㄴ) 점유이탈물횡령죄
	(ㄷ) 사기죄	(ㄹ) 법률상

33. 선박파괴·매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87조 선박파괴죄에서 말하는 ‘파괴’란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므로, 대형유조선의 유류탱크 일부에 구멍이 생기고 선수마스트, 위성통신 안테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형법 제187조에 정한 선박의 파괴에 해당한다.
- ②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매몰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선박매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③ 선단의 책임선 선장이 종선(從船)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책임선 선장이 풍랑 중에 종선 선장에게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④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가 하선 후 발생한 충돌사고이므로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4. 범인은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그에게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은 범인은닉죄를 구성한다.
- ②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주는 것은 범인은닉죄를 구성한다.
- ③ 경찰에서 수배중인 자임을 인식하면서 그를 투숙케 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은 범인은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

35.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이 대리시험을 치르려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잡힌 경우
- 건물관리인 乙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 ① 甲-업무방해죄, 乙-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경합범
- ② 甲-주거침입죄, 乙-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경합범
- ③ 甲-업무방해미수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경합범, 乙-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경합범
- ④ 甲-주거침입죄, 乙-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경합범

36. 내란·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되며, 폭동상태가 종료되어 평온상태가 회복되는 시점에 범죄가 종료하는 계속범이다.
- 나. 숙식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를 도와주는 것은 간첩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다.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라.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이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만 기여하였다면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마.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목적살인죄를 구성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2014년도 간부 후보생(경위)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	-----	------	--	-----	--

37.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 초등학교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나. 인터넷카페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 중단을 압박한 경우, 광고주들과 신문사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
- 다.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 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 폭력조직 간부인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甲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마. 마산시장과 STX중공업 회사 관계자 등이 ‘STX 조선소 유치 확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甲이 乙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서 마산시청 1층 브리핑룸 및 중회의실 출입구를 봉쇄하여 마산시장 등의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하였다. 甲과 乙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8. 다음 중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찰의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토록 한 경우
- ② 시장인 피고인 甲이 자신의 인사관리업무를 보좌하는 행정관 피고인 乙과 공동하여, 평정권자나 실무담당자 등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 ③ 해군본부 법무실장인 피고인이 국방부 검찰수사관 甲에게 군내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한 수사기밀 사항을 보고하게 하여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경우
- ④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기업관계자들에게 기업 메세나(Mecenat) 활동의 일환인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하여 기업관계자들이 특정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한 경우

39.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유형으로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함한다.
- ③ 피고인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 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다중에 의한 폭행에 해당한다.
- ④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이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0. 무고죄에 관한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나.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충분하다.
- 다. 매도인이 적법한 해제권 없이 계약해제의 통고를 하고 타에 이중으로 매각한 것을 매수인이 배임죄로 고소한 경우에 매수인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일지라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마.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바.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신고한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 사.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아. 객관적 사실대로 신고하였으나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